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만들기 캠페인, 이렇게 참여하세요!

지금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 기후정치의 주인공으로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의 손으로 지역 기후 거버넌스를 다시 짜기 위한 느슨하지만 지속적인 시민 실천 네트워크입니다.

-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기후시민의회' 제도화와 기후거버넌스 개편을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후시민의회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합니다.
- 기후시민의회 기획 실행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실제 제도와 조례를 바꾸는 후속행동에 참여합니다.

'기후시민의회 도입' 공약 촉구하기!



6·3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기후시민의회 도입과 조례 제정 공약을 촉구하세요.

- 촉구하기 캠페인 참여: <https://campaign.do/go.CCA>
- 후보자에게 정책 요구 보내기
- 응답 확인하기



인증샷으로 함께 외치기

인증샷 배경을 다운받거나,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진 찍어 SNS에 업로드해 주세요.

- 배경 다운로드: <https://campaign.do/CCA인증샷>

#기후시민의회
#기후시민의회정책요구
#기후거버넌스
#기후시민의회만드는시민주권

행동으로 요구하기

후보자에게 질의하기, 정책협약맺기,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지역에서 직접 목소리내고,
그 활동을 함께 나눕니다.



'지역 기후시민의회 공동실천단' 함께하기

신청서 작성: <https://campaign.do/act.CCA>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02-6404-8440

mail@ecpi.or.kr



기후정책,
시민의 결정으로

기후시민의회로
시민주권을
찾읍시다!



기후의제, 이제는 '진짜 정책'으로

기후위기는 에너지, 일자리, 주거, 건강까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의 기후정책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고 있을까요?

닫힌 결정에서 시민의 결정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길은 누군가는 더 많이 책임지고, 누군가는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후정의란,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과 부담,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 결정은 여전히 시민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기후정의에 열린 사회를 위한 첫걸음, 기후시민의회

✓ 갈등을 넘는 공론과 합의의 장

시민과 이해당사자가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선거를 넘어서는 책임 정치

미래세대와 중장기 탄소중립 경로까지 시민의 이름으로 논의합니다.

✓ 실행되는 정책

시민이 만든 결정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 이행해야 할 약속이 됩니다.



“ 우리의 요구: 지역 기후 거버넌스 판결이 ”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기후시민의회 제도화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시민이 참여하는 속의 구조의 제도화
-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운영과 행정지원
- 일반시민(추천) +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 논의 결과 공개와 공식 반영
- 정기적인 점검과 평가

✓ 더 확장해야 합니다

- 노동자·농민 등 다양한 주체 참여 보장
- 마을과 공동체 단위로 확산



기후시민의회란 무엇인가요?

- 평범한 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기후정책을 결정하는 '속의민주주의' 모델
-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구성된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여, 우리 지역의 기후 정책과 실행방안을 결정하는 기구

6·3 지방선거, 왜 '기후시민의회'가 중요한가요?

지방정부는 기후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주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시민 참여 없이 계획이 만들어졌고 거버넌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 지금이 결정적인 이유 = 2027년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원을 뽑는 지방선거 = 지역 '기후시민의회' 제도화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편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탄소중립위원회) 개편 대표성 + 시민과 이해당사자 참여 확장

✓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시민사회·노동·농민·청년 참여 확대
-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
- 민간 위촉위원 비율 70% 이상
-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 청년 참여 10% 이상 보장
- 공개모집 확대(10% 이상)

✓ 꼭 필요한 변화

- 산업전환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별도 구성
-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 탄소중립기본조례 전면 개정 필요

슬기로운 기후시민들의
기후시민의회 만들기
기후정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